

"15억7천2백만원? 15억7천2백만평?"

- 경기도의 주한미군 공여구역과 주변지역의 면적 현황 -

작성 : 경기환경운동연합

올해 6월은 유난히 어지러운 달이었다. 어느 시인이 4월은 갈아엎는 달이라 했지만, 미군기지 대응활동하는 단체에게는 6월이야말로 세상이 거꾸로 뒤집히는 나날들이었을 것이다.

6월5일 정성호 의원 대표발의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등 지원특별법의 주요 내용을 대폭 수정하는 개정안 발의, 6월14일 반환기지 환경치유 청문회를 위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현장조사에서 파주 캠프 에드워드의 유전(?) 발견, 6월 25일, 26일 국회 반환미군기지 환경치유 청문회 실시 등. 그리고 환경치유도 없이 반환된 미군기지 규탄집회와 기자회견들.

미군에게 공여된 토지(이하 ‘공여구역’) 총면적을 보면 전국 7,392만평, 그 가운데 경기도는 6,377만평이며, 전국에서 경기도가 차지하는 면적비율은 86% 정도다. 그 중에서도 반환이 예정되거나 반환된 경기도 공여구역의 면적비율은 더 높아져 무려 96% 정도며 크기는 5,384만평이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현황

	공여구역		반환(예정)공여구역	
	개소	면적(만평)	개소	면적(만평)
전국	93	7,392	54	5,384
경기도	51	6,377	35	5,172
경기도/전국 비율(%)	54.84	86.27	64.81	96.06

※ 『주한미군반환공여구역 투자가이드』 발췌, 경기도청

미군 공여구역과 그 주변지역의 지원을 위한 지원특별법에 따르면, 개발 가능 공여구역과 그 주변지역은 전국 총 국토면적의 12%인 11,951km²인데, 경기도는 무려 51.1%인 5,199.11km²나 된다. 온전히 감조차 잡을 수 없이 어마어마한 토지면적이다. 평수로 따지면 15억7천2백만평! 녹색으로 보이는 경기도 대부분이 개발가능 대상지역이라는 것이다.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등 지원특별법>에 따른 공여구역과 그 주변지역 현황

시도	특별법 공여구역에 해당하는 시군구	행정구역 총면적(k㎡)	공여+주변지역 면적(k㎡)	비율(%)
		A	B	(B/A)
전국	65	99,953.84	11,951.70	12.0%
경기도	20	10,182.51	5,199.11	51.1%
경기도/전국 비율(%)	30.77%	10.19%	43.50%	

※ 『주한미군반환공여구역 투자가이드』 발체, 경기도청

게다가 경기도 지자체 5곳인 연천군, 파주시, 양주시, 동두천시, 의정부시는 행정면적 전체가 그 대상이며 특별법의 성격상 쉽게 인허가 의제를 같음하고 사전환경성검토, 환경영향평가의 규제도 느슨하므로 수도권집중의 또 다른 화약고로 작용하고 있다.

문제는 지역특성에 맞는 발전계획이 없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늘 외면했기 때문에 크고 작은 공업단지, 위락관광지, 대학 유치 등 의 개발 매뉴얼을 내세우며 건설업계, 개발세력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도시와 똑같이 공장, 대학, 위락시설을 세우는 것이 과연 지역의 발전전략과 부합하는지, 각 지역 도시계획에 고려되었는지, 경기도는 물론 수도권의 국토계획에 부합하는지, 지역 생태환경이 지속될지 등등 여러 부문에 대한 세밀한 고려가 없는 점에서 행정기관의 공공 투기라 말할 수 있다. 이렇듯 전국 미군기지가 대부분 경기도, 그 중에서도 크고작은 미군기지가 경기 북부에 분포해있다는 사실이다.

행정구역면적 대비 특별법 대상지역의 면적 비율이 50%가 넘는 경기도 시군구

	대상 시군구	행정구역 총면적(k㎡)	공여+주변지역 면적(k㎡)	비율(%)
		A	B	(B/A)
경기도	연천군	695.61	695.61	100%
	파주시	672.56	672.56	100%
	양주시	310.24	310.24	100%
	동두천시	95.66	95.66	100%
	의정부시	81.60	81.60	100%
	포천시	826.41	773.66	93.60%
	하남시	93.07	75.95	81.60%
	평택시	453.07	354.35	78.20%
	양평군	877.73	549.47	62.60%
	화성시	688.23	426.69	62.00%
	가평군	843.39	489.00	58.00%
	의왕시	53.99	30.87	57.20%

※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안)』 발체, 2007.04.12, 행정자치부

미군기지 환경문제에 천착하는 환경·지역단체들은 한목소리로 개발 이전에 오염된 기지의 치유가 전제되어야 하며 지역발전의 지역주민의 생각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누누이 밝혔으나 실제 경기도의 진행을 보면 우리 바람과 너무 멀어졌다.

환경치유 국회청문회에서도 밝혀졌듯, 대부분 반환기지에서 지하수오염, 토양오염, 유류 지하저장탱크, 변압기 절연유(PCB) 등 제대로 처리하거나 치유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6월1일 추가로 반환된 미군기지 9곳 중 캠프 페이지, 시어즈, 에세온, 폴링워터, 에드워드 5개는 미군측의 거부로 환경치유 확인도 하지 못한 채 반환에 합의했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매향리 공군지상폭격장은 미군기지 반환협상의 부실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05년 환경오염조사없이 기지 관리권을 이양받았다. 또한 환경오염조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한 뒤 약 1달만에 반환됐다.

미군기지 반환 협상과정을 보면 어느 나라 국방부인지, 외교통상부인지, 환경부인지 너무 자주 헛갈린다. 세금은 국가에 내는데 세금으로 운영하는 이 정부는 우리 편이 아님을 너무 자주 체험한다는 점이다. 앞으로도 약 30곳 정도의 미군기지를 반환 받아야 한다. 앞으로는 앞서 진행되었던 반환협상이 또 다시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 이 글은 환경운동연합 월간지 <함께사는길>에도 실렸던 원고입니다.